‘감수성’과 반지성주의

교수칼럼

엄혜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감수성(sensitivity)’이란 말이 유행이다. 다양한 시민 의제를 이해하고, 삶에서 체화하는 역량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유엔, 유네스코, 옥스팜 등 국제기구에서 대중적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보급됐다.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평화 감수성, 생태 감수성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 의식이 지식과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업생활이나 일상 세계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대학 교양교육에 목적에도 부합한다.

감수성은 정서적 호소력을 갖는 어감과 달리 종합적 역량을 뜻한다. 아동학대에 관한 인권 감수성의 사례를 들어보자. 폭력을 훈육이 아니라 인권 침해로 인식할 수 있는 지적 사유, 피해아동의 고통을 감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 및 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정식화 할 수 있는 역량, 실천적 과제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과 용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인권 감수성의 고양으로 우리 사회는 ‘사랑의 매’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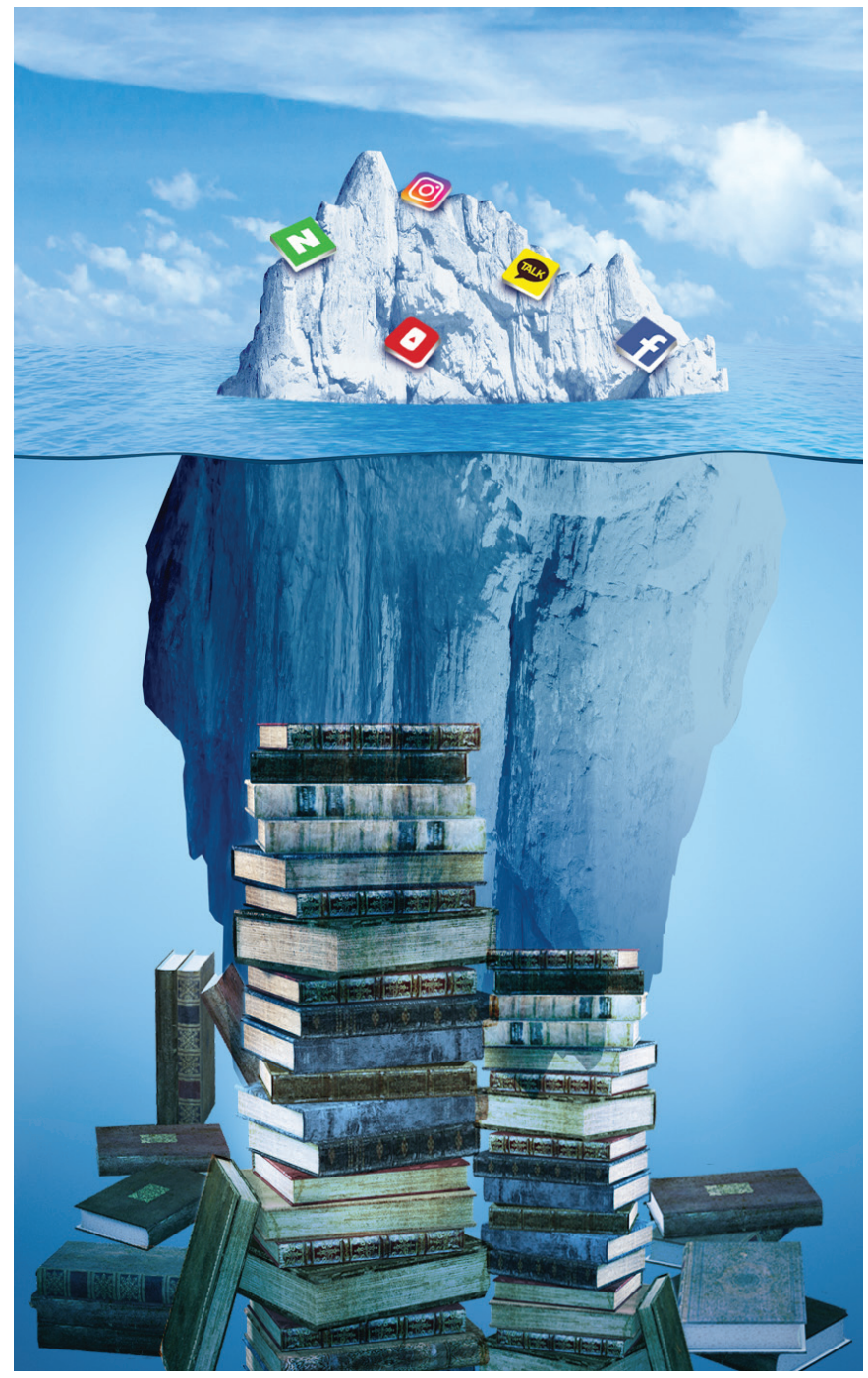
그러나 감수성의 의미가 여전히 분명하게 이해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얼마 전 대법원은 한 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두고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성인지 감수성이 법제도 언어로 상식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세간의 오해도 드러났다. 성인지 감수성이 여성 피해자를 무조건 옹호하는 관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폭력과 같이 젠더 관계의 동학(動學)이 중요하게 발휘되는 사건의 경우, 이를 법리 해석에 개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해자를 편들어 사실, 진술, 증인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들에 대한 실체화와 맥락화를 위해 필요한 관점과 그 실행이라 할 수 있다.

감수성 개념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반지성주의 문화가 한 몫을 한다. 감수성은 최소한의 합의에 기초해 있다. 인권, 젠더, 평화, 생태 등의 의제가 사회의 구조와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등한시될 수 없는 중요한 사회 분석의 범주임을 확인하고 이를 공적, 사적 삶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평등과 민주주의에 관한 시민 사회의 수많은 이슈들이 최소한의 합의만으로 파악하기에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 점이다. 기초적, 당위적, 규범적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 사유, 토론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 감수성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쓰지 않는 것, 성인지 감수성은 직장 동료에게 섹시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 생태 감수성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의 매뉴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근본적으로 지식 환경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수많은 지식, 정보, 담론을 쉽게 접하게 되었지만 인스턴트하게 유통되고 휘발되는 경향 역시 강해지고 있다. 더불어 깊고 오랜 지적 성찰의 위상과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설명충’, ‘진지충’ 등 진지한 사유와 성찰적 태도를 조롱하는 온라인 문화가 형성되고, 가짜뉴스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윤리적 저항감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이 적절한 예일 것이다.

호프스태터는 이와 같은 반지성주의적 태도와 실천이 엘리트주의에 도전해온 지식의 민주화 및 평등에 대한 열광 이면에 자리 잡아 왔다고 주장한다. 소수가 독점했던 지적 사유의 권리를 갖기 위해 행동해왔다면, 이제는 지적 사유를 행동해야 한다. 시민 의제에 대한 감수성 개념은 이렇게 지적 사유와 행동의 이분법적 분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가장 최신의 논의인 것이다.



교수사회의 변화를 위해 - ④

교수 길드의 전근대적 폐쇄성과 대학교육의 낙후

김종인(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김종인 교수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 내부의 불합리를 절실히 체험했다고 말한다. 그는 내부자이자 관찰자로서 그간 직접 보고 겪은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칼럼을 연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총 6회 분량의 연재가 계획돼 있다.

※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채용 과정은 외형적으로 일반 기업의 직원 채용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업은 근대적 합리성에 기초해 기능적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지만, 대학은 지원자의 연구와 교육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보다 오히려 다른 가치가 중시된다.

학과라는 중세적 길드 조직의 구성원들과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이 강조되는 것이다.

대학교수직은 매우 세분화된 전문직인 까닭에 채용 시 대개 특정 분야를 전공한 한 명의 인원을 뽑게 된다. 이에 10명 내외인 지원자들 대부분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학과의 기존 교수들과 학계에서 오랜 동안 직간접적으로 만나 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훤히 다 알고 있다. 그들의 출신학교, 지도교수, 전공분야 뿐 아니라, 외모, 말투, 행동 양식까지 안다. 그러므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AI가 아닌 이상 그들과의 인간적 관계를 배제하고 순수한 객관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교수 채용과정이 이렇게 전근대적인 것은 대학의 학과가 현대사회 다른 분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들은 수시로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이동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 교수들은 한 학과에서 평생의 직장 동료인 학과 교수들과 매우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성격은 학계의 전반적 인간관계뿐 아니라 학문적 풍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회는 학문적 토론의 장이 아니라, 동업자 집단 내 사교의 장에 가깝게 되어 있다. 학자들 사이의 진지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학문적 교류는 없고, 정치적인 교류가 주를 이룬다. 교수들은 후배나 제자를 다른 교수들에게 소개하고, 아직 교수로 임용되지 못한 이들은 공손한 태도로 그들에게 머리를 숙인다.

대학의 교수사회는 이처럼 동업자 조직인 중세의 길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교수선발에서 작동하는 길드 시스템은 학자 양성에서부터 시작된다. 길드 시스템에서 도제와 마스터의 관계는 단지 기능적 관계가 아니라 전인격적 관계이기도 한데, 오늘날 대학의 지도교수는 지도과정을 통해서 지도학생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격적 지배관계는 지도교수를 매개로 폐쇄적인 동업자 조직인 전체 학계로 연결된다.

이런 교수사회의 특성 때문에 최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도 대학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중세의 길드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인 구조적 변화를 겪었으며, 수많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왔다. 그 과정은 또한 경쟁의 과정이어서 한국 사회는 전 영역에서 극심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길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교수 사회만이 예외적인 별세계를 유지하고 있다.

길드는 구성원들의 배타적 이익 수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동업자 조직이다. 그리고 그 이익 수호의 기본적인 수단은 상호 경쟁 지양이다. 경쟁이 없다면 동업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쏟아내는 대기업,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는 중소기업, 안정된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직장인들, 제대로 된 직장을 얻기 위해 국가고시 공부하듯 하는 구직자들, 망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자영업자들, 이들 모두가 무한경쟁의 아수라장 속에 있다.

그러나 교수사회에는 경쟁이 없다. 폐쇄적인 교수사회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일단 들어가면 경쟁에서 자유롭게 된다.

길드적 구조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어서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거부한다. 한국의 대학사회가 아무런 기본적 변화 없이 외형적 성장만 중시한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결과로 대학의 외형은 발전하고, 교실마다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의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일반 사회의 구조 속에 있었다면 수십 년 전에 사라져야 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채 그간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온갖 제도적 특혜와 비제도적 특권을 누렸다. 한국 대학의 교수들의 사회적 위치는 세계의 어떤 국가의 교수들이 그 사회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교수들, 특히 인문학 교수들이 이루어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성취라고 내세울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한국의 인문학이 한 것이라고는 해외의 각종 사상 조류를 소개하거나 그것을 응용하여 적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전통학문, 이를테면 동양철학, 고전문학, 역사학 등에서도 고증학적 연구 외에는 대부분이 서양 이론을 통한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한국의 인문학 대학교수들이 이룬 가장 큰 실적은 다수의 대졸 실업자를 양성한 것이다.

〈연재칼럼 목차〉
1. 강사법 시행과 총장 선출
2. 대학의 주인은 재단이나 교수가 아닌 사회
3. 대학교수들의 구시대적 권리 행사
4. 교수 길드의 전근대적 폐쇄성, 대학교육 낙후
5. 교수 길드의 해체를 위한 국가공인박사제도
6. 교수들의 관습적 권한을 폐기해야 한다